

##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5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9. 9.

발 의 자 : 서영교 · 김영호 · 송옥주  
김민철 · 박성준 · 송기현  
이성만 · 남인순 · 양정숙  
김승원 · 윤미향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  
에 따르며,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 
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,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 
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
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, 급여  
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  
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·양육  
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 
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급여의 수  
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 신설).

##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) ① 제31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·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에게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32조의2(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) ① 제31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·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